

Online Series

2021. 06. 09. | CO 21-16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오 경 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당규약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남조선혁명론을 규정하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책을 규정하므로 남북관계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하고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수령유일 지배체제에서 수령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다. 향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개정 당규약에서 가장 논란이 큰 남조선혁명론 폐기 여부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 문제를 분석한다.

남조선혁명론 폐기 여부

개정 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고쳤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혁명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북한 정권이 남조선혁명론을 폐기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을 두고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남조선혁명도 포기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북한이 통일도, 남조선혁명도 포기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자주적 발전’은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을 의미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는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중국적으로 청산”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에서 민족해방혁명을 명시했다.

북한이 여전히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고수한다는 사실은 남조선혁명론의 발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반봉건을 삭제하고, 반제를 민족해방으로, 민주주의혁명론을 인민민주주의혁명론으로 수정해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인민을 삭제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으로 제시했고, 2021년에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 발전’으로 수정했다.

북한은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서 남조선혁명론의 용어를 수정했다. 북한이 1956년 당규약에서 반봉건혁명을 명시한 이유는 1950~60년대 한국사회를 봉건적 성격이 강한 사회로 보고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반봉건혁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 성격을 자본주의 사회로 재규정했다. 북한은 1970년 당규약에서 반봉건을 삭제하고, 자본주의 전복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론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대남혁명론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었다. 남조선혁명론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혁명과 한국 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으로 구성된다. 민족해방혁명은 남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정치적 지배를 끝내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반미 자주화라고 표현했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 정권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이다. 북한은 이를 반독재 민주화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21년 당규약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 발전’으로 수정했는가? 북한은 합법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 혁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남조선혁명론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집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개정 당규약에서 제시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과 혁명역량은 빠르게 변했다. 한국사회는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여야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무장봉기를 추구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운동이 크게 약화됐다. 1990년대까지 한국 학생운동과 사회주의세력이 제기한 민중봉기를 통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성공 가능성이 줄었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합법적 정치 공간에서 친북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이 창당하면서 합법 정치 공간에 진출했고,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출범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20석 확보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으나 1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한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은 유사한 성격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거나 연정을 통해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론에서 무력통일·무장봉기뿐만 아니라 선거 혁명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향후 북한은 한국의 합법 정치 공간을 이용하는 합법정당 건설과 선거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합법 정치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통합진보당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친북 정당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

개정 당규약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를 신설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했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의 신설은 북한 권력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제1비서 직제를 두고 후계 구도라는 주장과 당무 권한위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비서의 위상과 역할은 누가 임명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신설한 제1비서는 6월 상순 소집이 예고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가 갖는 정치적 함의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제1비서에 김여정이나 조용원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여정이 제1비서에 임명된다면, 이는 김정은 후계 구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조직지도부를 총괄한 경험도 없고, 당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제1비서에 임명된다는 것은 김정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1984년생으로 38세

에 불과하고 자녀들이 어리다. 후계 구도를 준비하거나 후계자 지명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김여정 제1비서 임명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북한의 당규약에는 당 총비서의 유고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 에리카 프란츠(Erica Frantz)는 민주주의저널(Journal of Democracy)에 실린 “독재자들이 죽을 때(When Dictators Die)”라는 논문에서 개인 독재 정권에서 독재자 사후에 후계자의 부재는 더 높은 불확실성을 만들지만 후계자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유고로 인한 권력투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일성·김정일은 후계자 지명을 통해서 총비서의 유고에 대비했다. 김일성은 1974년 63세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했고, 김정일은 뇌졸중이 발생한 직후인 2008년 67세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후계 문제를 책임질 대리인을 지명해야 유사시 권력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반면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담당비서인 조용원이 제1비서에 지명된다면, 이는 김정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당무의 권한위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수령제의 특성상 당·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이 수령에게 집중된다. 김정은은 매일 결재해야 할 서류들도 방대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김정은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대남·대미정책은 김여정 부부장에게, 경제 분야(내각)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장과 김덕훈 내각총리에게,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김정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무의 권한위임으로 볼 수 있다. 제1비서는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리병철(군사), 정상학(감사),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과학교육) 등 7명의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총괄하는 당무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조용원이 제1비서에 임명된다면, 조직담당비서를 겸직하면서 일상적인 당무를 총괄하고 김정은의 당 지배를 보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북한의 개정 당규약(2021)에서 핵심 문제인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과 제1비서 신설 문제를 분석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하고, ‘사회주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수정한 것은 남조선혁명론의 폐기로 보기 어렵다.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고수하면서 합법 정치 공간을 활용한 선거 혁명까지 포함해서 대남혁명론을 확장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존의 대남전략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선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합법정당 건설을 모색할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제 신설의 의미는 누가 제1비서에 임명되는지를 두고, 그 위상과 역할을 판단해야 한다. 김여정이 임명된다면, 김정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고, 조용원이 임명된다면, 김정은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당무 권한위임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제1비서를 임명하지 않고 공식으로 남겨 둔다면, 이것도 유사시 후계 구도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계 구도는 김여정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제1비서 직제가 후계 구도든, 당무 총괄이든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